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위원회 직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 12. 01. (규정 제1호)
제정안 시행인준 2023. 06. 18. (규정 제2호)
제1차 전부개정 2024. 01. 21. (규정 제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6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직능위원회의 기구와 업무 분담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024.1.21.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능위원회 위원장: 직능위원회 전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전체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2.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내부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3. 직능위원회 위원: 직능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직능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위원
4. 직능위원회 구성원: 직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

<2024.1.21. 신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지역위원회 직능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단, 일부 조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제4조(사업 목표) ① 직능위원회는 직능별 정책을 수립하여 춘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확대에 이바지한다. <2024.1.21. 개정>

- ② 직능위원회는 춘천시 내 직능 단체의 의견을 규합하여 지역위원회 정책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다. <2024.1.21. 개정>
- ③ 직능위원회는 소속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2024.1.21. 신설>
- ④ 직능위원회는 춘천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접근의 턱을 낮추기 위해 힘쓴다. <2024.1.21. 신설>
- ⑤ 직능위원회는 정책제안서 제도 등의 운영으로 춘천시 기반 선출직 공직자와 권리당원, 시민을 이어주는 정책싱크탱크화를 실현한다. <2024.1.21. 신설>
- ⑥ 직능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내 상설·상설특별·비상설특별위원회와 직능위원회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2024.1.21. 신설>

제5조(직능위원회 위원장의 책무) ① 직능위원회 위원장(이하 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대표자로서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직능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 <2024.1.21. 신설>

- ② 직능위원장은 모든 분과를 총괄·관리하며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직능위원회 위원의 임면,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1. 신설>
- ③ 직능위원장은 다음 연도 활동계획과 필요·요구사항, 당년도 활동 결과를 종합해 매년 12월 24일까지 지역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024.1.21. 신설>
- ④ 전향에 따른 보고는 직능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2024.1.21. 신설>
- ⑤ 직능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고시·공고의 발령과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단, 운영규정에 규정된 내용 안에서 한정한다. <2024.1.21. 신설>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책무)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총책임자로서 분과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24.1.21. 신설>

-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직능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1. 신설>
- ③ 분과위원장은 다음 연도 활동 계획 및 당년도 활동 결과, 위원회 운영 기본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체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직능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024.1.21. 신설>

제7조(직능위원회 위원의 책무) ① 직능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준수한다. <2024.1.21. 신설>

② 직능위원회 위원은 소속된 분과위원회와 각종 회의, 직능위원회 이름으로 개최하는 각종 간담회 및 행사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진다. <2024.1.21. 신설>

③ 직능위원회 위원은 소속 위원을 비방하는 언어나 행위 등 일체를 삼가야 한다. <2024.1.21. 신설>

제8조(직능위원회 위원의 권리) ① 직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위원회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위원회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위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 위원회의 중요 정책 및 결정, 분과의 합병·해산에 대해 토론과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024.1.21. 개정>
6.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2024.1.21. 개정>
7.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2024.1.21. 신설>

제9조(직능위원회 구성원의 의무) ① 직능위원회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2. 직능위원회 내부 비밀을 지킬 의무
 3. 동료 위원을 존중할 의무
- ② 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원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024.1.21. 개정>
- ③ 위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규정을 따른다. <2024.1.21. 개정>

제2장 직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10조(조직) ① 효율적인 직능위원회 운영을 위해 직능위원회 안에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張)이나

조항으로 정한다. <2024.1.21. 신설>

②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직능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2024.1.21. 신설>

③ 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 운영과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張)으로 정한다. <2024.1.21. 신설>

④ 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운용할 수 있다. 정책보좌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張)이나 조항으로 정한다. <2024.1.21. 신설>

⑤ 직능위원장은 위원회 행정 사무의 처리를 위해 직능위원회 안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張)이나 조항으로 정한다. <2024.1.21. 신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등) ① 직능위원회 안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2024.1.21. 개정>

1. 중소기업분과위원회 :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시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분과위원회 : 보육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계와의 협력과 교육 문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분과위원회 :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분과위원회 : 주거복지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계와의 교류·협력과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대응환경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체육분과위원회 : 체육계와의 교류·협력과 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북한이탈주민분과위원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난재해대책분과위원회 : 사회적 재난 및 재해예방에 관한 대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종교분과위원회 : 종교단체 및 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혁신분과위원회 :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분과위원회 : 정보통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전통문화발전분과위원회 : 전통문화의 발전과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인권분과위원회 : 춘천시의 인권 발전과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분과위원회 :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이 밖의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신규 분과위원회를 개설하고자 하는 위원의 신청서를 받고 그 설치 여부를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64조제1항의 제1호와제2호전단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024.1.21. 개정>

③ 분과위원회가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64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격상되는 경우 그 분과는 해체된다. <2024.1.21. 개정>

④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024.1.21. 개정>

⑤ 분과위원회 위원이 10명에 근접해 있거나 10명을 넘었을 때 분과위원장은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64조 3항에 따라 임명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미개최될 때는 위임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정한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5명 이하가 되면 소속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직능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합병요청이나 폐지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정해진 요청서를 제출한다. <2024.1.21. 신설>

⑧ 전항의 요청을 받은 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가장 가까운 직능위원회 회의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합병이나 폐지 여

부에 관해 심의한다. <2024.1.21. 신설>

⑨ 직능위원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능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통해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듣고 전체회의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024.1.21. 신설>

제12조(정책보좌관제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직능위원장은 운영규정에 규정된 분과위원회 중 개설되지 못한 분과위원회나, 특정 분야의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 정책의 조정·관리 등, 직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2024.1.21. 개정>

② 정책보좌관의 명칭은 “직능위원회 00(담당 부문 명칭) 정책보좌관”으로 하며 숫자로 대체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③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다음의 공식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단, 정책조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은 범위 산정에서 제외한다. <2024.1.21. 개정>

$$(17 - \text{개설된 분과위원회 수}) \div 3$$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 정책보좌관의 분과 참여는 금지한다. 단, 직능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분과위원회만 참여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⑤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의 구분·변경은 직능위원장이 고시한다. <2023.06.18. 신설>, <2024.1.21. 개정>

제3장 직능위원회 내 각급 회의의 정의·구성 등

제13조(직능위원회 전체회의의 정의 및 구성) ① 직능위원회 전체회의는 직능위원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일반적인 총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2024.1.21. 신설>

② 직능위원회 전체회의의 구성은 직능위원회 구성원 전원으로 한다. <2024.1.21. 신설>

제14조(직능위원회 전체회의의 권한과 역할) 직능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제출하는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의 승인
2. 직능위원회 활동방향 점검

3. 직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심의
4. 직능위원회 필요·요구사항에 대한 결의·건의문 채택
5. 직능위원회 발전을 위한 위원들의 제언과 단합

제15조(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정의)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직능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직능위원회 위원을 대표하며 직능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때는 그 역할을 대신한다. <2024.1.21. 신설>

제16조(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직능위원장과 부위원장
 2.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2024.1.21. 신설>
 3. 정책보좌관 <2024.1.21. 신설>
- ② 그 밖에 직능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위원이나 관계자는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제외한다. <2024.1.21. 개정>
- ③ 직능위원장과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2024.1.21. 개정>

제17조(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통과한 안건 처리
 2. 직능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안건 처리
 3. 분과위원회의 설치·합병·폐지 심의
 4.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그 밖의 인원 인준 처리와 사퇴 수리
 5. 직능위원회 전체회의 미개최 시 운영규정 개정 심의
 6. 직능위원회 전체회의 미개최 시 결의·건의문 채택
 7. 운영위원회 회의 주차와 일시·시간 등의 확정
 8. 직능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 등 심의
 9. 직능위원회 신규 위원모집과 관련한 사항 논의와 신규 위원의 자격심사
- ②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역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직능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정의 및 구성) ① 직능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직능위원회의 기둥의 역할로서 직능별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4.1.21. 신설>

② 직능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한다.

<2024.1.21. 신설>

제19조(직능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직능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2024.1.21. 신설>

1. 회의 주차와 일시, 시간 등 확정
2.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권
3. 위원회 운영규칙 마련 (단, 운영규정의 틀 안에서로 한정한다.)
4. 직능위원회 전체회의나 운영위원회로의 안건 위임 및 제출권
5. 분과별 지역 정책의 개발

제20조(자격심사의 운영) ① 직능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업무수행능력 등의 검증을 위해 자격심사제도를 운영한다. <2024.1.21. 신설>

1. 기존 직능위원회 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지원하는 경우
2. 신규 위원모집에 지원하여 직능위원회에 입회 대기 중인 경우
3. 기존에 직능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직능위원회에 입회하여 신규 분과위원회 개설을 요청하고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4. 직능위원장이 자문위원의 위촉을 요청한 경우

②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와 공개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활동계획 등 필요한 내용의 발표를 추가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③ 개인에 대한 자격심사 일수는 하루로 하며 심사 예정시간 초과, 심층면접, 다수 지원 등의 이유로 심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21조(승인·인준의 거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그 승인이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분과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 5명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024.1.21. 개정>

2. 선출 과정에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인준 후 내정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나 해당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2024.1.21. 개정>

4. 자격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심사 총점 평균이 70점을 넘기지 못한 경우 <2024.1.21. 신설>

5. 그 밖에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반수 이상의 의결로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2024.1.21. 개정>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용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4.1.21. 개정>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함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를 인준할 때는 이를 승인한다. <2024.1.21. 개정>

④ 직능위원장은 임용후보자의 인준이 거부되었을 때 거부된 날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서 활동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4장 직능위원회 내 회의의 운영

제22조(회의의 종류) 직능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회 전체회의
2.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3. 직능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4. 직능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

제23조(회의 소집의 주기) ① 운영규정 제22조의 회의 소집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1월, 6월, 12월에 소집한다.
 2.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
 3. 직능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
 4. 직능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회 재적인원 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1. 재적 직능위원회 위원·재적 운영위원회 위원·재적 분과위원회 위원 반수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직능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할 긴급한 의제가 있는 경우
- ③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위원 반수 이상의 참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결의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 ④ 발대식·간담회·정책연수 등이 있을 때는 그달에 개최 예정인 회의를 겸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24조(회의의 소집 방법) ① 각 회의의 장은 회의 개최일의 최소 14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직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단, 애초의 소집권자가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 부(割)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공고한다. <2024.1.21. 개정>

② 임시회의의 경우는 제1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의 진행 및 운영 등) ① 직능위원회 전체회의·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자문위원회 회의는 직능위원장이 진행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진행한다. <2024.1.21. 신설>

② 직능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2024.1.21. 신설>

③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이거나 부위원장 역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이 사회권을 대행한다. <2024.1.21. 신설>

④ 직능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른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4.1.21. 신설>

⑤ 각 회의의 장은 규정 제24조 제1항의 소집 공고와 함께 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4.1.21. 신설>

⑥ 전항에 따라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재적 위원의 반수를 넘지 못한 경우 각 회의의 장은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안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한다. 단, 의결제출자의 찬반 여부는 회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024.1.21. 신설>

제26조(회의의 대리 출석 금지의 원칙) 직능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참석하는 그 어떤 회의에도 위원 본인을 제삼자에게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2024.1.21. 개정>

제27조(회의자료의 교부) ① 각 회의의 장은 각급 회의에 부쳐질 안전에 관한 자료를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024.1.21. 개정>

②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이 있어야 하는 안전은 해당하지 아니하다. <2024.1.21. 개정>

③ 제1항의 교부는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28조(의안의 종류) 직능위원회 모든 회의에 부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2024.1.21. 개정>

제29조(의안의 제출) ① 직능위원회 위원은 자기가 참여하는 회의와 관련하여 해당 회의에 의안과 공고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제출서나 수정안제출서를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1.21. 개정>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회의록과 함께 일괄 정리하여 지역위원장에게, 분과위원장은 직능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024.1.21. 개정>

제30조(의안의 상정) ① 각 회의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회의에 부친다. <2024.1.21. 개정>

② 각 회의의 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24.1.21. 개정>

제31조(의안의 심의) ① 각 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② 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 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각 회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③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의안제출서와 수정안제출서를 제출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한다. <2024.1.21. 개정>

제32조(의안의 표결 방법)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각 회의의 장은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②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024.1.21. 신설>

제5장 분과위원장의 선출 및 보궐선거

제33조(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와 선출 및 사퇴) ①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각 분과의 첫 회의 때 선출하며 전임자의 임기는 선출 즉시 만료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안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선거하여야 한다. <2024.1.21. 개정>

③ 새로운 분과위원장이 선출되면 분과위원장은 회의록과 함께 직능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여부를 심의한다. <2024.1.21. 개정>

④ 분과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능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며 직능위원장은 이를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2024.1.21. 개정>

⑤ 보궐선거는 사퇴서가 수리된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24.1.21. 개정>

⑥ 분과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역시 유고 시 직능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4.1.21. 개정>

제6장 자문위원회

제34조(자문의 요청) ① 직능위원회 위원은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②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직능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024.1.21. 신설>

제35조(자문위원회 회의) 직능위원장은 정책 자문에 있어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36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정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정원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다. <2024.1.21. 신설>

$\text{개설된 분과위원회 개수} \times 2$

제37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이고 직능위원회의 분과위원이나 위원장급이 아니어야 한다. <2024.1.21. 개정>

제38조(자문위원의 의무) 자문위원은 직능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자문할 의무를 진다. <2024.1.21. 개정>

제39조(자문위원의 활동 기한) 자문위원의 활동 기한은 6개월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4.1.21. 개정>

제6장 직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40조(위원의 해촉) ① 직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면 해촉된다. <2024.1.21. 신설>

1. 도당윤리심판원에서 제명·당직자격정지·당원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3. 불참 사유의 사전 통보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타 위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회 이상 직능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책보좌관이 경고 처분을 한 경우
5. 직능위원회와 관계없는 영상·게시물 등을 단체 대화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회 이상 직능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책보좌관이 경고 처분을 한 경우
6. 기타 직능위원장이나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② 제2호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의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 신설>

③ 직능위원장은 각급 회의에 각각 2회 이상 무단 미 출석한 위원에게 해촉 대상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24.1.21. 신설>

제41조(도당윤리심판원에 대한 징계 청원) 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와 운영규정 제38조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해촉되었으면 직권으로 도당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42조(위원의 해촉 보고) 직능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회의록과 함께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위원회 사무국에 보고한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직능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결의한 경우
2. 분과위원장이나 부위원장과 위원, 그 밖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직능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직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

제43조(회의록) ①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제3장 회의록규정을 따르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장과 운영위원,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이 서명하며 직능위원장이 확인서명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전>

② 운영위원의 서명은 회의 출석부로 대체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44조(홈페이지의 운영) 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 내부 소통 활성화, 대내외 홍보 등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그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
<2024.1.21. 신설>

제45조(사무국으로의 업무처리 위임) ① 직능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 등의 처리를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1. 회의 개최의 공고와 자료 통지
2.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통보
3. 정책보좌의 총괄
4. 직능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의 준비와 회의록 작성
5. 인사 관리
6. 규정 개정안과 제안서의 작성
7. 각종 서식의 작성

② 직능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처리를 정책보좌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46조(직능위원회의 활동 연도) 직능위원회의 활동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된 해에는 직능위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4.1.21. 신설>

제47조(위원의 모집) 직능위원회의 위원모집은 지정된 기간 게시한 현수막,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 위원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심사의 방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제48조(회의 개최 주차·일시의 확정 등)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의 개최 주차·일시는 매년 1월에 열리는 각급의 첫 회의에서 정하며, 변경 시에는 재적 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4.1.21. 신설>

제49조(규정의 개정 요건·절차) ① 이 규정의 개정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동의한 개정안발의서가 접수된 경우
2. 직능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법령이나 당헌·당규 조항이 개정된 경우

② 규정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24.1.21. 신설>

1. 직능위원장이 전항의 몇 호에 따라 개정하는지 밝히며 1, 6, 12월에 접수되었거나 그 한 달 전에 접수되었을 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개정요청서를 직능위원회 홈페이지나 단체 대화방에 탑재하며 참석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3. 직능위원회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개정안발의서를 탑재한 다음 날부터 7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4. 전체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함께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을 축조(한 조항씩 읽으며 심사)심사한다. 단, 위원회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전체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한다.

6. 의결된 지 7일 이내에 직능위원장은 개정 규정안을 홈페이지에, 개정 사실은 전체 위원 단체 대화방에 공포한다.
7. 직능위원장은 규정 개정에 대해 지역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규정 개정
에 대해 위임을 받았으면 이를 생략한다.
- ③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구분은 전체 조문 수의 2/3 이상의 개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50조(직능위원회 위원의 활동 계속 여부에 대한 파악 및 조치 등) ① 직능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에 대한 활동 계속 여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
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파악해야 한다. <2024.1.21. 신설>

② 직능위원장은 활동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에 대해 면직요청안을 전체회의나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4.1.21. 신설>

부 칙 (2022.12.01. 규정 제1호)

1.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 직능위
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제2항의 17번(소상공인분과위원회)은 다음 정가지역대의원대회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최초 구성•선출되는 위원회와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3.06.18. 규정 제2호)

1. 종전 제6조 제15항의 “⑮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는 부칙으로 정한다.”를
“⑮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는 부칙으로 정한다. 다만, 직능위원장이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2. 위 개정안은 2023.06.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21. 규정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홈페이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개최한 회의 등 직능위원회의 모든 행
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제48조의 시행특례) 직능위원장은 규정의 공포일에도 불구하고 2024.1.1.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